



## 언론노조 산별협약 '원년' 될까 연합뉴스 사측도 최근 3차례 교섭 참여

전국언론노조가 올해를 본격적인 산별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산별공동협약 쟁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은 그동안 언론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최근 세 차례 교섭에 응하면서 이견을 줄이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언론노조 산별교섭에는 전체 112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67개 사업장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최소한 1회 이상 교섭에 나온 상태다. 언론노조 집행부는 예상보다 산별교섭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결렬 선언과 파업투쟁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던 전략에서 방향을 선회, 낮은 수준이라도 산별공동협약을 따내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 해 산별협약을 탄생시킬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산별교섭의 장을 열어갈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도 산별공동협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별 조합원들에게 현재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총의를 묻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협상 진행과정** = 지난 5월초 언론노조가 산별교섭 방침을 결정했지만 당시만 해도 교섭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언론노조는 2000년 이후 산별로 전환한지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산별'이라는 안팎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초기 협상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상견례를 겸한 1차 교섭에는 고작 8개사 사측 대표만 참석했고 2, 3차 교섭에도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그러나 6월 들어 3차 중앙교섭부터

사측 참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노조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도 속도를 더해갔다. 중앙교섭을 거부한 몇몇 회사에 대해선 대각선 교섭 형태로 언론노조 교섭단 전체가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일 신문분과의 제6차 중앙교섭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사가 모두 참여해 산별교섭이 실질적인 교섭 국면에 접어들었다. 물론 협약안의 내용을 놓고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 **왜 산별협약인가** = 산별협약은 민주노총 산하 산별 조직 가운데 일찌기 산별교섭의 원형을 제시한 금속, 공공,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 먼저 쟁취한 경험이다. 또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산별협약이 노사교섭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언론노조는 산별교섭을 두 가지 틀에서 해석하고 있다. 우선 방송 등 언론 사유화와 공공성 파괴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정책에 맞서 언론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 전선을 산별교섭의 틀 속에서 만들어내자는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산별협약 내용에 언론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못박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반드시 투쟁의 방편만은 아니다. 낱알이 악화되는 언론산업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보다 강력한 산별조합으로서의 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연합 사측 입장** = 연합뉴스 사측은 처음 언론노조에서 산별교섭 요구 공문을 받은 직후엔 미온적인 태도



전국언론노조 산별 중앙교섭단(신문분과) 교섭위원들과 연합뉴스 사측 대표로 참가한 신현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10개사 사측 대표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6차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로 일관했다. 지부와 체결한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산별교섭장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초 3차 중앙교섭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사측에선 김기서 사장의 위임을 받아 신현태 경영기획실장이 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사측은 비정규직 부분과 언론 공공성 강화 노력 의무, 유일교섭단체 등 조항에서 산별공동협약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진보매체와 지역신문들 중에는 협약안을 대부분 수용한 곳도 있다. 연합 사측은 6차 교섭 이후 수정안을 작성해 전문과 협약 우선, 조합비 공제 등 몇몇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를 전했다.

◇ **조합원 총의를 묻고 싶다** = 산별교섭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연합뉴스 지부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산별협약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산별교섭을 하는 이유 자체를 궁금해하는 조합원들이 대다수다. 연합뉴스지부 집행부는 향후 노보발행과 대의원대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내용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견해를 모으고자 한다. 특히 하반기 사내 최대 현안인 뉴스통신진흥법 연장·제개정 문제와 맞물려 산별교섭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산별공동협약이란?

전국언론노조가 마련한 산별공동협약안은 △산별조합 활동보장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보호 △언론 공공성 등 크게 세 장으로 나뉜다. 1조 유일교섭단체는 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표해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교섭하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 2조는 산별공동협약이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연중 1회, 1박2일의 유급 교육시

간을 부여하고 신입직원에게 2시간의 조합 소개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4조 조합 전임은 1명 이상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5조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규정했다. 6조 임시상근은 교섭기간 중 교섭일에 한해 조합측 교섭위원의 전임을 인정하는 항목이고 7조는 조합원 범위로 조합활동과 관련해

### 언론노조 산별교섭 일지

- 5.9 산별교섭 공동 협약안 확정(광주 언론노조 비대위)
- 5.14 산별교섭 노.사 상견례 겸 1차 교섭(KTX 회의실)  
노측 교섭위원 29명 등 100여명 참가, 사측 8개사 참가
- 5.23 산별 2차 교섭, 사측 6개사 참가
- 6.3 산별 3차 교섭, 사측 45개사 참가
- 6.11 산별 4차 교섭, 연합뉴스 사측 처음 참가
- 6.12-17 산별교섭 미참가 사측, 대각선 교섭으로 압박
- 6.18 산별 5차 교섭, 분과별 교섭으로 전환, 연합뉴스 참가
- 7.1 산별 6차 교섭, 신문분과 16개사 참가, 연합뉴스 참가

조합가입을 앞두고

가장 빠른 취재지원을

수습종료를 약 5일정도남긴 6월 26일. 동기들의 원성 속에 네트워크부에 전화를 걸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노트북 지급은 언제 되나요? 이번 주까지 지급이 안되면 지금 쓰는 노트북을 들고 내려가야 하나요?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시나요? 새 노트북 지급은 몇 인치인가요? 기종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중 가장 우울한 부분은 바로 ‘노트북 8월 지급설’. 부팅을 20번이나 해야 제대로 파란 윈

도 시작창을 볼 수 있고, 부팅되는데 최장 5분이상 걸리는 이 노트북을 실제 취재현장에서 써야 한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를 내보내는 기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가장 ‘빠른’ 뉴스를 위해 노트북이나 와이브로 등 취재지원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되는 회사를 상상합니다.



고유선 대 .경북취재본부

의 방향과 스타일, 해당 최신 시사흐름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부 교육중 교통비(택시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회부 수습 4개월동안 택시비와 식비만으로도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했습

니다. 타사의 경우 택시비 영수증을 내면 어느정도 지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사회부 수습중 상당한 부담이 되는 택시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서 순환교육 되살리는건...

이제 수습교육이 끝났다. 인사부 교육부터 시작하여 사회부, 국제부, 영상취재부 및 사진부 수습을 모두 마쳤다. 6개월간 여러 현장에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 때의 기억은 앞으로의 기자생활을 좌우하리라 생각될 만큼 강렬했다. 다만 몇 가지 바라는 바를 이야기 하자면 예전에 있었다는 부서순환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고심끝에 지금의 일정으로 결정됐겠지만 며칠이라도 각 부서 수습을 거치면 정치부, 경제부, 스포츠레저부, 문화부 선배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라 생각한다. 수습 기간 지원도 확충되었으면 한다. 수습기간 지급되는 노트북은 속도가 느린 구형이라 시급을 다루는 현장에서 때때로 속을 태웠으며, 와이브로나 T-login 등 통신장비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했으며 교통비에 대한 실질적 보조가 되지 않아 라인배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나현진 경기북부취재본부

수습 인사발령 빨리 나야...

아직 노조원은 아니지만 축구 응원, 몇 번의 회식자리에서 노조 선배들을 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입사한 지 6개월이 채 안돼 어떤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짧은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몇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수습 후반 교육이 좀더 여유롭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2주 동안 사진, 영상취재, 그래픽뉴스까지 많은 것을 배우느라

벽찬 감이 있었습니다. 수습들 인사발령이 조금 일찍 낮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순환 근무자들은 발령 확정이나 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지체됐고 서울 근무자들도 자신이 어디로 갈 지 몰라 초조했습니다. 또 발령 전에 부서 지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은지 국제뉴스1부

프레스 완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날 전국 철도노조 집회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봤을 때, 마음 속 깊이 나도 저 자리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통신사라는 회사 특성 상 타 언론사보다 업무량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또 기자증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벌써 너털너털해졌습니다.

뒷주머니에 한 번 넣었다가 꺼내보니 휘어져서는 다시 곧게 펴지지 않습니다. 프레스 완장도 필요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전경들에게 붙잡히기 십상입니다.



송진원 사회부

마음 편히 질문할 선배 없나요?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수습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회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교육생 신분인 수습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교육기간 중 회사 내에서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아 회의실과 흡연실, 교육장과 복도를 전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회사의 공식적인 교육 내용 이외의 궁금한 점들을 마음 편히 질문할 선배들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회사가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더라면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애정이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순환근무 역시 수습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

다. 문제는 지방순환근무제도 자체가 아닌, 제도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필요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방근무는 본사 각 부서 근무와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른지, 기자 개인의 경험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마치 당위성도 설명되지 않은 제도를 위해 수습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계연 전북취재본부

택시비 50% 지원해야...

드디어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합뉴스 노조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신경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노조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습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내년에 새로 들어오게 될 후배들을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습기자라 하더라도 연합뉴스의 구성원인 만큼 적당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택시비가 많이 들어 월급으로 그것을 다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

게 여겨지지만, 수습 중에는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비는 4,50% 정도 지원해주는것이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자에게 필수적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와이브로 지급도 해줬으면 합니다.



이유미 전국부

수습 끝나고 며칠만 휴가 있었으면

우선 무사히 수습 교육을 마치게 해주신 회사와 노조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입’ 전이었음에도 노조에서 많은 관심으로 회사에 적응하기 쉽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습을 마치면서 회사에 바라는 것 두 가지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우선 수습 종료 후 며칠간의 휴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30일까지 수습 교육을 받고 7월1일자로 발령이 나는 시스템인데 여러 면에서 휴

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부 4개월 수습을 하면서 지친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근무자의 경우 지방에 거주지를 구하고 계약하고 이사할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사 발령자의 경우 부서에 빨리 적응하고 한 몫을 하기 위한 공부와 최근 기사



김동규 경기취재본부

우리도 튼튼한 신분증을 갖고 싶어요

연합뉴스의 가족이 되어 첫 출근한 2008년 1월 2일, ‘편집국/기자’가 뚜렷이 박혀있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취재 현장에 나가게 되면서, 신분증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신분증이 너무 쉽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코팅이 벗겨지고 종이가 들떠 해체위기(?)를 느껴야 했습니다. 동기들

의 신분증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일선 취재 현장에서 타사 기자들의 튼튼한 신분증을 볼때마다 ‘우리 회사 신분증도 좀더 튼튼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신분증을 튼튼한 재질로 바꿔주세요!!



이연정 국제뉴스2부

### 지방근무 발령자들 배려 아쉬워

사회부 수습 당시 꽤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라인 변동을 바로 전날 저녁에야 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취재원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 한 채, 마지막 야간보고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짐을 싸 새 라인으로 이동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라인 적응력과 순발력을 키워주려나 보다' 싶어 그냥 이해하고 말았더랬습니다. 7월 1일자로 드디어 '인간'이 됐습니다. 발령 공지는 25일에 났고, 저는 울산취재본부에서 1년 반을 보내게 됐습니다. 집도 구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근무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 시

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인사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 상황에서 선불리 집을 구하고 차를 구입하고 주변을 정리하기란 어려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늦은 인사공지'는 연합뉴스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혹 이 역시 사원들의 근무지 적응력과 순발력을 키워주려는 '정책적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기창  
울산취재본부

### 지역 주재에 관심을...

흔히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공채 출신과 경력출신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신라시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육두품(六頭品)처럼 말입니다. 연합뉴스에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수습생활을 하며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 부산주재기자로 들어왔습니다. 서울본사취재기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방에 순환근무를 하며 지원되는 몇몇 조치(주택, 이사지원금 등)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다기보다는 섭섭

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집이 부산이라 서울에서 6개월을 생활하며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했습니다. 사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당장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발령이 난 상태로 혜택을 못받게 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오게 될 후배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  
부산취재본부

### 교육장소가 부족해...

이제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회사에 대해 무엇을 알겠나마는 수습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다. 바로 수습 교육을 위한 공간이 회사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부 수습처럼 밖에 나가서 받는 교육이라면 상관 없지만, 국제부나 사진부, 동영상부 교육 때에는 마땅히 교육

할 장소가 부족해 곤욕을 치렀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확보가 잘 됐다면 더 알찬 수습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임형섭  
사회부

###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저희 29기 수습기자 1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탈수습'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일이 더 많았지만 언제나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습 기간을 거치며 사회부 수습을 시작하기 전 사진과 동영상 교육을 확실히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될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기에 시간을 두고 차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방주

재기자로써 바라는 점은 지방주재 기자직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현재 본사취재기자로 입사해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대출과 이사가 지원되지만 지방주재기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이 고향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김지선  
제주취재본부

### 회사·사원 소통에 아쉬움...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보내면서 연합뉴스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과 바라는 점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물질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부 수습을 하면서 와이브로같은 통신 장비와 교통비, 통신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들은 "수습 때면 반까지(?) 된다"고들 말씀하셨지만,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도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도 못해드려 죄송했습니다. 회사와 사원들이 활발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일을 열심

히 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지만, 노조가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고 없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동안 1,2지방을 어느 부서로 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허무해졌습니다. 원하는 부서에는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최소한의 의사표현과 설득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최인영  
국제뉴스3부

### 체계적 영문기사 교육이...

연합뉴스의 영문기자로 입사해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쳤습니다. 사회부 사건팀에서 4개월, 국제부에서 1달, 영상취재부와 사진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취재현장을 다니고 기사연습을 하면서 '기자'로서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문' 기자로서의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6개월여의 수습동안 영문기사의 형식이라든가 구성, 영어구사능력에 대한교육의

기회나이를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문 기사 연습도 영문기사작성에 도움이 되는것도사실이지만영문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지식도 없이 이제 며칠 후면 바로 7월 1일부터 영문기자로써의 일을 시작해야하는데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큼니다.



김보람  
외국어뉴스1부

### 여사원 휴게실 여전히 미흡

"회사 들어가니까 어때?"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회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맞고 장점이 많은 회사에 들어온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기자로 생활하기에 연합뉴스는 성장 가능성이 크고 주어지는 기회가 많은 회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수습 생활을 거치며 매일 들었던 연합뉴스 본사 건물에는 휴게 공간이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일의 효율을 높입니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담배로 해소하는 기자 상당수가 흡연할 공간이

부족해 비상계단이나 1층 현관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자가 설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국제부 소속으로 야근을할때 여사원 휴게실(8층)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대낮이라도 반주하는 일이 잦은 여기자들이 5분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사원 휴게실의 시설은 매우 미흡합니다. 가구로 1인용 소파 5개와 싱글침대 1개가 있을 뿐입니다.



최정인  
인천취재본부

### 영문기자 섬세한 배려를

우선 부족한 저를 뽑아 주셔서 원하던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준 회사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사부터 6개월 동안 수습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수습들을 믿고 투자와 인내를 아끼지 않은 선배들과 회사 덕택에 저를 비롯한 모든 수습들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기자로서 발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영문기자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채

용된 영문기자 두 명이 편집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본기를 갖춘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었겠지만 영문기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따로 영문기사작성법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박보람  
외국어뉴스2부

# 재충전휴가 · 연봉사우 문제 등 논의

##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서 다양한 의견 쏟아져

노동조합 집행부는 지난 6월13일 회사 7층 회의실에서 2008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재충전휴가제 추진, 연봉사우들의 노조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제21대 집행부가 처음 개최한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36명중 23명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안건 토의에 앞서 회사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 또 뉴스통신진흥법 연장, 제·개정과 관련해 올 하반기 회사를 둘러싼 복잡한 환경을 전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재충전 휴가제는 올들어 젊은 사우들의 이직 현상이 잇따르면서 현행 장기근속휴가를 좀 더 짧은 연차에서 보완해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경제부서쪽 한 대의원은 “재충전 휴가는 현실적으로 인력 안배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도 “대체 인력 문

제만 없다면 5-7년차에 말 그대로, 재충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휴가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재충전 휴가제 도입 방식을 놓고는 장기근속휴가 시행연차를 앞당기는 방안과 재충전휴가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 단기 연수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연봉사우 노조 가입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경력 공채로 들어와 호봉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연봉사우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연봉사우 노조 가입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조합 집행부는 그러나 더 이상 연봉사우 문제를 마냥 미뤄둘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늦어도 연말 이전

에는 이 문제를 조합의 주요 현안으로 부쳐 추후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사내 연봉사우는 167명으로 전체 조합원 415명(29기 수습사원 제외)과 비교해도 3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연봉사우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되며 기자직 86명, 일반직 81명이다. 대부분 2004년 이후 입사했고 현재 영상취재부, 영상제작부, 전략사업본부, 스포츠레저부, 문화부, 경제·산업·증권부, 각 지역취재본부, 외국어뉴스국 등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연봉사우 노조 가입 문제는 지난 2005년 제19대 노조 때부터 3년 이상 논의돼온 연합뉴스 노조의 해묵은 난제중 하나다.

3년 전부터 조합 안팎에서 집행부와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성과는 없는 상태다.

물론 연봉사우 처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임·단협을 통해 호봉사원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봉사우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소속감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지역취재본부의 한 연봉사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노조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한 연봉사원은 “경력직이 ‘버퍼존’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 용병 의식이 동료들과 보이지 않는 이질감을 낳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낮춰 타사의 이직제외에 불필요하게 흔들릴 여지도 남겨둔다”고 지적했다.

노조 집행부는 다만 올 하반기 사내 최대 현안인 뉴스통신진흥법 제·개정 문제가 걸려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법 문제가 일단락되는 시점 이후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물론 상당수 사우들의 노조 가입 문제는 기존 조합원들의 총의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차적 당위론도 전제돼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하반기 사법 국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연구·조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2008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6월 13일 오후 회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려 대의원들이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 1면에 이어

## 비정규직 보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등 이견 많아 기존 단협과 상충될땐 근로조건 저하하지 않는 쪽 선택

해고된 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이는 언론노조 규약과 같다.

산별교섭 안정화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 8조이고, 9조는 산별교섭 성실교섭의무를 담았다.

가장 많은 쟁점이 있는 10조는 비정규직 채용과 사용 제한 조항이다. 비정규직 도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정

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선 안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 업무를 2년 이상 대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못박고, 비정규직 채용이 회사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11-14조도 비정규직 균등 처우, 4대 보험 적용, 비정규 실태조사, 비정규협력기금 등의 내용이다. 15-16조는 임

금기준과 언론산업 최저임금제를 담았다.

17조를 놓고도 사측 이견이 많은데 언론공공성 강화 노력 의무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정보공개법 개정과 취재접근권 보장, 언론 지역성 강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반대 등이 내용이다. 이후 조항은 언론 윤리와 공정정보에 관한 조

항으로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산별공동협약과 기존 단협안이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 의문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기존 단협안이 근로조건을 더 철저히 보장할 경우엔 기존 단협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